

불법 알면서도 수의계약...경찰 “금전적 이득” 뇌물죄 판단

광주경찰, 복구 의원·공무원 등10명 검찰 송치

구의원 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 11건...배우자는 허위 견적서 제출 혐의
기초의회 고질적 병폐 지적 속 다른 의원들도 수사...추가 위법 가능성도

광주시 복구의회 백순선(나 선거구·무소속)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에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복구청과 수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 공무원들은 백 의원의 무형의 압박에 시달릴 것을 우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백 의원에게 이어 나머지 기초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형사 처벌 대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불법 수의계약으로 이익 행한 기초의원=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백순선 복구의회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를 통해 모두 11건(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복구청과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의원은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해당 업무와 부서를 감사·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현행 지방계약법(33조 2)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알고도 복구청과 이같은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백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구청과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허위로 타 업체의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적용했다. 백 의원은 이와관련,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이 뇌물수수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밝힐 입장은 없다”면서 “해당 사실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계약 체결한 공무원들=경찰은 또 백 의원 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복구 공무원 8명에 대해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백 의원이 참여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 등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계약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복구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발언, 업무보고 등 구정 감시와 견제를 내세워 온갖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민원 해결을 압박하면서 힘들게 하는 기초의회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들 공직자들 주변 목소리다.

경찰에 적발된 한 공무원은 “(백 의원이) 의회에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직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구정 소관 업무를 감시하는 의원인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초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행정사무감사, 오보 발언, 자유질의 등으로 은근히 괴롭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서 “해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덜 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는 실무상 관습”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경찰이 복구의회 의원들의 위법 행태를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위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반 년 넘도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백 의원에 대해서만 검찰로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임에도 반 년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 정치권이 연루되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포괄사업비 등 들여다 볼 게 많아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의원별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 충돌 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도 어랑곳하지 않는 초법적,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확인되면서 이들을 공천했던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조만간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멋모르고 빌려 탄 공유 전동킥보드 ‘낭패’

무면허 운전엔 보행자 치어...여대생 벌금 500만원

20대 여대생이 10분 빌려타는 데 2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내면서 5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됐다.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행자 보호·법규 준수 등을 소홀히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여·25)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쌍암공원에 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8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3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

근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에게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와 보행자를 치어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가 적용됐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재판장은 “학생 입장에서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에 따른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발령 금액이) 과하지 않다”면서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변경될 사정이 별로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젊은층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부 설명은 보행자 보호·안전 규칙 준수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해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A씨는 이날 “죄송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연어가 잘 자라서 돌아오렴

3일 순천시 동천하류 세월교 인근에서 허석 순천시청과 공무원들이 어린 연어 5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방류한 연어는 동천에서 30~50일간 머문뒤, 남해바다로 이동해 3년 후 산란을 위해 다시 동천에 돌아오게 된다. <순천시 제공>

고속도로로서 했던 경찰 암행순찰

광주지역 일반도로에서도 한다

고속도로에서 이뤄졌던 경찰의 암행순찰이 광주지역 일반 도로에서도 진행된다.

광주경찰청은 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 투입, 시내 모든 도로에서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광등·사이렌·캠코더 등 경찰

장비가 내장된 상태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차량이다.

경찰은 주로 음주,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많은 시민이 인식하도록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나서는 한편, 계도기간 중에도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0년새 1만5000명 급감

실질적 지원·관심 확대 필요

1만 7000명이 넘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10년이 지나면서 급감했다. 현재 생존자들도 90대 안팎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과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존자는 올 1월 기준, 전국적으로 24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만 해도 생존자는 1만 7148명에 달했지만 2015년 9937명→2019년 4034명→2021년 2400명 등으로 해가 갈수록 생존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역시 지난해 18명이

숨지면서 생존자는 131명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지역 생존자는 15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요양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매달 80만원의 의료지원금 등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해마다 피해자들이 급격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